

# 공정위 “카드사, 멤버십 서비스 마음대로 중단·변경 못한다”

1376개 약관 심사, 57개 시정요청  
고객 예측가능성 저해·불측의 피해  
요금부과 등 애플리케이션 부적절

# A카드사 서비스 안내장: “인천공항 발레 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 (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카드 서비스 안내장: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카드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카드사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지난 달 31일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꼽혔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에 관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카드의 결제 기능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앱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고메시지 차단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 요청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 도래 전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하는데 채무자의 경우 담보손상 등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가스공, 국내 첫 ‘초저온 LNG 베어링’ 개발

1년6개월 연구 끝에 국산화 성공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초저온 LNG(액화천연가스) 펌프용 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했다.

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외산에 의존해 왔던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은 영하 163℃ 초저온 환경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며 고압으로 압축하는 힘을 견디는 축하중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한일하이테크 및 한국기계연구원과 ‘초저온 베어링 국산화 실증 협약’을 맺고 1년 6개월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국산화를 이뤄냈다.

K-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평택기지 LNG 펌프에 초저온 베어링을 설치하는 모습 /가스공사

연구 개발 및 현장 실증,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플랫폼이다. 가스공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지원 중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실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고려해 평택 LNG 생산기지의 펌프 설비를 개방함으로써 8000시간에 걸친 실증 시험 환경을 제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과기정통부, 韓-英 디지털 협력강화 논의

AI, 6G 이동통신·네트워크 등 점검

정부가 영국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 체결에 본격 시동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과학혁신기술부(DSIT)에서 폴 스킨리 정무차관을 만나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위성통신 등 디지털 전반에 관한 협력 사항들을 점검하고 체결식 등 구체적인 준비 사



7일(현지시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오른쪽)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과학혁신기술부(DSIT)에서 폴 스킨리 정무차관을 만나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향후 이룬 시일 내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권익위, 스포츠투토 예산 현실화 합의 조정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승인된 예산 대비 인건비 초과 집행  
50명 이상 퇴사... 파행 우려 민원 제기

스포츠투토 수탁사업자가 예산대비 인건비 초과로 사업 파행이 우려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현실화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8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투토코리아(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운영계획 승인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투표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스포츠투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시한 위탁운영비율 및 예산항목별 5개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으로 구분해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제부 승인을 받아 투

표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 승인된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돼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퇴사해 사업 파행이 우려되자 스포츠투토코리아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스포츠투토코리아는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의 초과 집행액은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면서도 마케팅비 등 정산 항목의 미집행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목별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에 맞게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쓰임새가 정해진 항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탁운영비율 변경이 없다면 변경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달청 입장과 국민체육진흥법 상 사업 계획 승인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올해부터 남은 수탁기간 동안 기승인 받은 비정산 및 정산 항목별 예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매년 전년도 실제 집행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된 비정산 항목 예산을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 운영 안정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 협의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문제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의 건전 경영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긴급 수탁사업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체육진흥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근로자 ‘직종별’ 건강보호·질병예방 앞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소방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 활성화 협약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8일 국립소방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

강보호 및 업무상 질병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직종별’ 건강보호방안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장비공유 등으로 구분됐다.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을 위한 2개 분야 공동연구를 양 기관 전문인력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

게 된다. 연구주제는 1) 직종별 건강유해성 평가를 비롯해 2) 작업환경 개선 연구 3) 유해인자 노출예방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 등이다.

또 연 1~2회 연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각 기관의 특수 연구장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양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12만톤 매입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유지

정부가 쌀 수확기에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12만톤을 인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쌀값은 10월 5일 기준 20kg에 5만4388원에서 11월5일에는 5만346원으로 한달사이에 상당히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5만톤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어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안도군이 2022년 안도농협 RPC 쌀수매 현장. /안도군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 공급물량을 차단할 예정이다.

/차성근 기자 skc8472@